

청소년의 원활한 고용진입을 위한 학교세팅에서의 직업교육 강화 방안 연구

한국과 미국 비교*

정영순·송연경**

청소년의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촉구하는 직업교육 개혁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학교세팅에서의 직업교육 제도를 분석하여 정부의 역할과 파트너십, 교육체계, 교과과정, 현장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내었다. 비교분석 결과, 첫째, 학교세팅에서의 직업교육이 청소년의 고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강력한 주도는 물론 교육계와 산업계 간 밀접한 협력 체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직업교육과 고용 간의 원활한 연계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교육계와 산업계의 협력을 통해 자격증과 연결된 직무기술을 표준화하고, 이를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한편 현장교육의 가이드 라인과 감독·평가기준 마련에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이 학교세팅에서 고용으로 쉽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직업교육 선택의 유연성이 보장되도록 통합형 학교형태를 활성화하는 한편 학생들의 기본적 자-

* 본 연구는 BK21 연구사업 지원으로 이루어짐.

** 정영순(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연경(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질을 보장하는 평가제도 도입과 자격증 획득을 용이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산업계에서 유용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무기술을 표준화하여 직업교과과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인문계와 실업계 모든 학생들에게 평생교육과 직무능력의 기반인 기초인문교육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통 기초 직무교과과정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전문직의 직업선택을 위해 다양한 전문 직무교과과정을 제공하고 학생의 적성에 따라 모듈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고용과 가장 밀접한 현장교육에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욕구 및 학습여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장교육 기준에 따라 기업이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는 한편 학교와 기업에 슈퍼바이저를 두어 학생들의 현장교육을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문제제기

1997년 이전에 7%에 머물렀던 우리나라 청소년 실업률이 1999년 4월 현재 12.6%(48만 명)로 전체 실업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 실업 중 중졸이하 자는 17.2%(5만 명), 고졸자는 12.9%(31만 명), 전문대졸 이상 자는 10.6%(12만 명)로 저학력일수록 실업률도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교육훈련을 받지 않고 경제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은 이보다 훨씬 많은 73만 명으로(통계청, 1999) 상당수 청소년들이 진학도, 취업도 하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오래 전부터 12%~26%인 높은 청소년 실업률 문제를 겪고있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도 청소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으로 청소년 실업 문제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OECD, 1998a). 특히 고졸이하의 학력을 지닌 청소년들의 실업률은 이보다 높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OECD, 1999a). 이처럼 청소년들의 실업문제가 심각해지면서 1980년대부터 OECD회원국들은 학교교육 후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 심혈을 기울여 왔다.

1990년대 중반부터 OECD국가들은 국가주도하에 노동시장에 적합한 질 높은 인력 양성을 위해 학교의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교육과 고용이

사회제도로 효율적으로 맞물려 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책모형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도 교육과 고용제도의 분리 운영이 청소년의 직업세계로의 진입에 장애불이 있다는 인식하에 <학교-직업이행기회법(School-to-Work Opportunities Act)> 등 여러 법률을 통해 직업교육체제 정비와 직업교육내용의 질적 제고, 그리고 학교-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함으로써 청소년 고용증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진입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으나 학교교육이 인문계와 실업계로 이원화되어 학교내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대상자가 매우 한정적이다. 이로 인해 대학 진학생을 제외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84.3%인 것에 비해 직업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18.2%만이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통계청, 1999). 또한 직업교육을 받은 실업계의 경우에도 교육과 노동이 큰 정책적 틀로서 연계되지 못하고 교육내용이 노동수요에 부합하지 못함으로 인해 실업계 졸업생의 약 41%가 비정규직으로 취업하였고, 대부분 서비스직, 기능직같은 비전문직에 머물러(정인수, 1999)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이 학교에서부터 고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직업교육정책의 마련이 시급한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미국의 직업교육개혁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학교세팅에서의 직업교육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학교교육을 통해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정책방안과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고자 한다.

2. 청소년 고용증진과 직업교육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진입(School to Work Transition)은 청소년들이 교육의 마지막 단계에서 노동시장으로, 거기서의 안정적인 위치를 획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OECD, 1998b).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 직업세계로 진입하는 단계는 그 이후 생애 직업경력 발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시기로 이 단계에서 오랫동안 실업상태를 지속하게 되면 미래의 생산적 능력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결국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진입은 직업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직업교육의 필요성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다(이주호, 1996; 정인수, 1996; OECD, 1998a).

서구 선진국들은 역사적 배경과 현실적 여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취하는 정책내용은 상이하지만,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긴밀한 연결을 통해 직업교육을 강화시키려는 공통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즉 정부수준에서 자격과 직무기준설정, 유연한 직업교육체계, 적절한 교과내용, 그리고 학교와 기업의 긴밀한 파트너십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OECD, 1998a, 1998b, 1999a; 이무근, 1998).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진입에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는 나라들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다. 왜냐하면 관련 이해당사자에게만 맡길 경우 자발적인 참여는 한계가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국가들은 정부차원에서 고용 및 산업정책과 직업교육 정책이 연결되어 경쟁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사회제도로써 기능하도록 종합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할 뿐만 아니라(Drake, 1994; O'Higgins, 2001), 고용정책과 교육정책을 연결하기 위해 행정적 구조를 통합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 청소년훈련계획과 기술직업교육개혁을 각각 독립적으로 교육부와 고용부에서 운영되던 것을 1995년 교육고용부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중앙의 규제와 지역의 유연성이 잘 조합될 때 더 효과적으로 나타난다(OECD, 2000). 최근 직업교육에 있어 지방화의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인식하에 많은 나라에서 정부차원에서 기술에 대한 기준과 자격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지방차원에서는 지역 사정에 맞게 적용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 고용의 연계를 위한 학교와 산업체 간의 파트너십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Dykman, 1996).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교육제도와 산업체를 연결하는 협의단체(*intermediary bodies*)를 설립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고용능력이 무엇인지 학교에 정기적으로 신호(*signalling*)를 보내주도록 할 뿐만 아니라,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사회 수준에서도 원활한 현장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기업과 학교 간의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학교와 산업체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직업교육이 자격증으로 연결되는 것은 고용

으로 진입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Drake, 1994).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자격과 기준을 표준화하는 것은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질과 수준을 보장하므로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자격기준의 표준화를 교과내용에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은 학교의 직업교육을 통하여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일찍이 국가수준에서 직업교육훈련 기준과 자격기준을 일치시킴으로써 인력양성을 추진해 왔다(이용순, 1998). 영국 또한 1990년대에 국가 차원의 자격기준을 마련해 학교교육과 연계시킴으로 일정교육을 마치면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의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하여 정부의 주도하에 직업교육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교육체계를 변혁시키는 것 역시 중요시되고 있다. 과거 대부분 국가에서는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은 분리된 구조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된 구조는 인문계 학생의 경우 교실에서 배운 지식이 현실과 괴리되고 직업교육에 대한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는 반면 실업계 학생은 특정기술 습득에 치중하여 좋은 학습자로서 필요한 기초능력교육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이 분리된 교육구조는 경직되어 지속적인 경력개발과 계속교육을 위한 통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한쪽 경로에 고착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선진국들은 인문 및 직업 교육과정의 통합구조가 분리구조보다 진학과 취업에 있어 이상적인 접근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Raizen, 1989; Resnick, 1987; 이무근, 1998).

통합교육의 형태는 모든 학생에게 보편적으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다양한 교육 기회가 열려있는 유연한 교육구조로 학생의 선택이 자유로워 청소년의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킨다(Vickers, 1994). 즉 통합된 교육구조는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삶의 경로를 변경할 수 있는 융통성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있다(신명훈, 1998; 정인수, 1999; 진미석, 1997). 더 나아가 통합적 교육구조는 고등교육으로의 이행도 원활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Papadopoulos, 1994).

직업교육의 보편화와 함께 학생들의 자격과 수준이 고용가능한지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철저한 평가체제를 통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여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받음으로 학생들의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한 학생들을 걸러냄으로써 학생들이 기본 자질을 갖추도록 촉구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평가제도와 자격증 제도의 연결은 학생들에게 직업세계에서 요구되는 자질과 적응력을 갖추게 하며 고용으로의 연결고리를 제공하게 된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교육단계별 국가공통 평가시험과 자격증시험을 동일하게 인정하여 졸업후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였다(정영순·석재은, 2000).

청소년들의 고용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의 체계가 잘 정비되어도 직업교육 내용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직업교육 교과과정에서 학생들이 기본적 자질을 갖추고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교육내용을 개혁하는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현대사회는 전문기술뿐 아니라 기본적인 인문지식을 지닌 노동력을 요구하고 있다. 인문계와 실업계로 이분화된 구조에서는 인문계 학생들이 직업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실업계 학생들은 기초인문교육을 받지 못해 계속교육 및 직업능력을 갖추는 데도 한계를 갖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실업계 학교에서도 점차 인문교육을 중시하고 있으며(OECD, 2000), 많은 나라들에서 통합적 교육구조를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일반 인문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업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많이 습득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학교 교육기간은 제한되어 필요한 전문지식을 모두 지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산업체에서 필요한 기술은 급변하기 때문에 어제의 기술이 오늘 쓸모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Kearns & Doyle, 1988) 특수 분야의 전문기술 습득은 효용성이 크지 못하다. 따라서 학교 직업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노동시장의 요구와 변화에 맞추어 잘 대처하도록 정보관리기술, 팀워크, 대인관계기술 등 보편적인 기초직업능력 향상이 중요시되고 있다(Hotchkiss & Dorsten, 1987; Raffe, 1994).

이러한 기초직업능력에 대한 교육내용에 부가하여 학교에서 전문적 기술에 대한 다양한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학생이 원하는 직업교과과정을 모듈화하여 선택하여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전문적 교과과정이 자격증과 연결되어 직업교과 이수 후 바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고용을 원활히 하고 있다(OECD, 1998a).

한편 직업교육에 있어서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산업현장의 일과 긴밀히 연계되도록 하는 점도 점차 강조되고 있다(Horener & Wehrley, 1995).

현장교육은 직업교육이 좀더 실용적이고 적절해지도록 하며 일과 관련된 실질적인 지식과 기술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OECD, 2000). 또한 많은 연구에서 고용수와 청소년을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고용으로 연결되는 통로로써 고용 효과가 높다고 입증하고 있다(Middleton, Ziderman & Van Adams, 1993). 이러한 현장교육은 학교와 기업체 간의 파트너십이 전제될 때 가능한데, 학교와 기업체 간 연계는 학생들에게 폭넓은 기업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인 노동시장 지식을 제공하며, 원활한 직업세계로의 진입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ILO, 1997; Martin, 1997).

상기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역사회·학교·기업과의 파트너십, 직업교육의 보편화와 직업교육 선택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교육체계,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는 교과과정, 그리고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장교육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과 파트너십, 교육체계, 교과과정, 현장교육을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직업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3. 미국의 직업교육 체계

중등교육이 청소년의 일상 생활이나 취업에 도움이 안된다는 비판이 대두되자 미국 정부는 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1917년 <스미스-휴즈법(Smith-Hughes Act)>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도와 달리 우수학생을 위한 인문교육과 열등학생을 위한 직업교육으로 분리되어 고용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1980년대 들어 높은 실업률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로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지만, 전반적인 직업교육의 체계 변화로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반면 1990년대에는 정부가 ‘고용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으면서 본격적으로 모든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을 위해 대규모 연방정부 입법들을 마련하게 되었다. 예컨대 1990년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향상을 위한 <퍼킨스직업기술교육법(Perkins Vocational and Applied Technology Education Act)>과 1994년 직업교육 및 인문교육의 국가공통기준에 관한 틀을 제시한 <2000년을 향한 미국교육법(Goals 2000: Educate America Act)>, 그리고 학교-고용진입 프로그램 개발 및 직업교육의 새로운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직업이행기회법(School-to-work Opportunity Act)> 등을 제정하여 직업교육의 보편화 및 직업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등 직업교육에 대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고용 진입을 위한 미국 직업교육의 변화는 1990년대 이후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과 파트너십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정부의 역할과 파트너십이 교육체계, 교과과정, 현장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정부의 역할과 파트너십

청소년의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미국 정부의 정책적 강조는 교육과 고용과의 긴밀한 연계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미국은 영국과 같이 교육부와 고용부를 교육고용부로 통합한 행정체계는 갖춰지지 않았으나, 관련 부서간 연계 노력은 엿볼 수 있다. 예컨대 직업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서는 교육부이지만 최근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경계가 좁아지면서 노동부를 비롯한 연방정부의 여타 부서나 행정기관도 직업교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이상일, 1998). 따라서 '학교-직업이행기회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부와 노동부가 업무를 공동으로 담당하기 위해 '학교-직업이행사무소(National School-to-Work Office)'를 별도로 설립하여 두 부서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공동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상일, 1998).

1990년대 들어 미국의 직업교육은 여러 연방입법의 제정을 통해 직업교육에 관한 통일된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1994년 <2000년을 향한 미국교육법>은 직업교육 및 인문교육에 대한 교육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근거로 주마다 상이한 교과과정을 표준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직업교육 교과과정에 직무수행과 직결되는 내용들이 잘 반영되도록 정부는 1994년 <국가표준직무능력위원회법>에 근거해 산업계, 교육계,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가표준직무위원회(National Skill Standards Board)'를 설립하였다. 이 위원회는 작업활동, 필수지식과 기술, 성공적 직무수행증거, 평가전략, 기술·지식항목 등에 대한 표준직무기준치를 선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Bailey &

Merritt, 1995). 또한 1996년 ‘Building Linkage 프로젝트’는 직업교육관련 협의체, 교육부, 산업부, 노동조합, 민간단체의 대표자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직무기술이 직업교과과정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다(<http://nces.ed.gov>). 그럼에도 민간차원에서 난립된 자격증을 직무기준의 표준화와 연계하여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전환하려는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까지 직업교육 이수과 자격증 획득의 연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 연방정부는 현장교육에서의 학교와 기업 간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국가 학교-직업이행사무소(National School-to-Work Office)’를 설립하였다. 이 사무소는 현장교육프로그램의 기준을 정하는 한편, 각 지역 ‘직업교육협의체’에 프로그램 정보 및 선진국 사례를 제공하며 자금 지원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 기업체, 노동조합, 지역의 민간기관간의 파트너십을 위해 설립된 ‘직업교육협의체’는 현장교육 직업교과를 선정하고, 학생의 배치와 학생의 성취도 평가 규정을 만들며, 기업의 현장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슈퍼비전 및 평가를 하고 있다.

더불어 직업교육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며 이루어지는데, 지방분권적 정치구조를 지닌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영향력이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직업교육 개혁을 주도하기 위해 최근 들어 연방정부는 강력한 규제와 함께 자금지원을 통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예컨대 연방정부는 직업교육성적이 좋은 주 및 지역에는 인센티브로 추가자금지원을 하는 반면, 성과가 좋지 않은 주 및 지역에는 지원자금을 축소시켜 연방정부의 의도대로 주정부가 따르도록 촉구하고 있다(이상일, 1998).

한편 주 및 지방정부는 연방법에 의해 수립된 큰 기준을 기반으로 지역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데, 대부분의 주 및 지방정부는 연방정부의 지원금과 더불어 주의 세금, 지방교육세를 병합하여 학교, 학생,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주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소 상이하나 우선 학교에는 직업교육 실시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학생에게는 현장교육시 훈련수당과 교통비를 지원하며, 기업에는 현장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와 훈련수당(수당의 50%) 보조와 세금감면(연 20십만 달러 한도 또는 기업 소득세의 10%정도)의 혜택을 주고 있다(<http://wdr.doleta.gov/opr/fulltext>). 이처럼 학교, 학생, 기업 각각에 대해 인센티브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같이 미국 정부는 표준직무기준 선정 및 직업교과과정의 표준화, 관련분야간의 파트너십 체제 구축, 그리고 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 장치를 통해 직업교육의 개혁에 적극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교육체계

미국의 교육체계는 유치원, 초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중학교, 고등학교 포함)으로 전체 12년 과정이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다. 중학교까지 공통된 교육이 이루어지나 고등학교부터 인문계고등학교(Classical high school), 직업계고등학교(Technical and Vocational high school),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합한 종합고등학교(Comprehensive high school), 그리고 특수목적고등학교(Design, Fashion, Aviation school 등)의 4가지 형태로 구분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보편화된 직업교육을 강조한 <퍼킨스직업기술교육법>과 <학교-직업이행기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1992년 전체학생 중 인문고교생 43%, 직업계고교생 12%, 종합고교생 45%를 차지했던 비중이, 2000년 현재 전체고등학교 중 인문고교 3%, 직업고 3%, 특수목적고교 4%, 종합고교 90%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종합학교에 진학하여 직업교육의 보편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학생들의 직업교육 선택은 학교구조상 인문계고등학교나 직업계고등학교를 선택한 경우 직업교육을 위해 학교체계를 변경할 수는 없지만, 통합형 구조인 종합고등학교의 경우는 직업교육 선택이 자유롭고, 입학 후에도 학교 체계내에서 다시 변경가능한 유연한 구조를 지녔다. 이에 1992년 종합고등학교 과정별 이수자를 살펴보면 인문교육과정 32%, 직업교육과정 24%, 인문 및 직업과정 모두는 44%로 나타나 선택의 자유가 보장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종합고등학교는 10학년(고2년) 때 개인의 적성에 따라 직업관련 전공을 정하는데,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10학년 이후에도 개인의 적성에 따라 변경가능하여 직업교육 선택의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직업교육 선택은 학생들이 8학년(중3년) 때 상담교사와 면담을 통해 정하도록 의무화하여 직업교육 선택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해 적합한 학교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같이 종합고등학교의 활성화로 직업교육이 보편화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

업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녔지만 실제 직업세계로 원활히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소한의 기본 자질 습득에 대한 평가제도가 필요하다. 이에 미국은 전국 차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소능력시험(minimum competency testing)’을 치르는데,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중심으로 4, 8, 12학년 때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12학년 때 실시되는 시험은 졸업인정요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제도를 통해서 일정 기준 미달시 유급시키고, 졸업까지 기준에 달하지 못하면 졸업장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학생들이 일정 수준의 능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격증과는 연계되지 않아 다음 단계의 진학이나 취업으로는 연결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녔다.

3) 교과과정

미국의 직업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직업세계에 대한 기초지식과 전학경험을 하도록 다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로인식, 현장견학, 고용주방문, 직업의 중요성 및 좋은 직업습관 등의 과정을 제공하고, 중학교에서는 여러 직업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진로탐색, 직업박람회, 지역사회서비스 등의 과정을 제공하며, 고등학교부터 본격적으로 심화된 직업교과과정 및 현장교육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직업교육은 고등학교부터 학교체계별로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내용과 비중이 달라지는데,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별도의 직업교과과정 없이 인문교육 위주이며, 직업고등학교에서는 농업, 상업, 보건, 가정, 사무, 기술영역 및 장인 기술

<표 1> 학교-직업이행체계에 따른 미국 학생들의 진로개발과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9~10학년	11~12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된 기본인문교육 · 진로인식과정 · 현장견학 · 고용주방문 · 직업의 중요성 및 좋은 직업습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된 기본인문교육 · 진로탐색 · 흥미사정 · 진로계획수립 · 직업박람회 · 지역사회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된 기본인문교육 · 진로상담 · 진로선택 · 현장방문 · 멘토링 · 진로자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된 기본인문교육 · 구조화된 현장교육 · 직업기술교육 · 응용학문교육 · 기업순환

자료 : “www.studentconnection.org/About/default.html”.

등 전문 직업교육 위주로 제공되고, 종합고등학교는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정부가 계속교육과 직업능력의 기반으로 기초 인문교육을 강조하면서 인문계뿐만 아니라 실업계 학생들에게까지 인문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보편화된 종합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직업교과과정을 살펴보면, ‘소비자 및 가사교육’(Consumer & Homemaking Education), ‘기초직업교육’(General Labor Market Preparation), ‘전문직업교육’(Special Labor Market Preparation) 과정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직업교과과정은 ‘국가표준직무위원회’에서 정한 표준직무기준과 주 정부에서 정한 직무기준치를 반영해 고용과의 연계성을 보다 높이도록 하고 있다.

우선 직업 교과과정 중 ‘소비자 및 가사교육’과 ‘기초직업교육’과정은 고등학교 9~10학년 과정으로, 전자는 가정에서 필요한 각종 기술에 관한 과목으로 육아, 요리, 가정관리 과목들이, 후자는 일반노동시장준비를 위한 교과과정으로 타이핑, 일반노동시장기술(문제해결능력, 개인적 관리능력, 인간관계기술, 협상력, 팀워크 등), 그리고 현장경험 과목들이 해당된다. 그리고 전문직업교과과정은 11~12학년에 제공되는 특정직업에 대한 전문화 과정으로 농업, 기업사무, 마케팅, 보건, 직업가정경제학, 일반산업, 기술통신 등 일곱 가지 프로그램 영역으로 각각 세부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다. 이러한 교과목은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춰 모듈화하여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전문교과목을 집중적으로 이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국립직업교육평가원에서는 전문 직업교과과정 중 특정 직업분야에서 카네기(Carnegie)¹⁾ 단위로 3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집중 직업인’(vocational concentrator)으로, 전문 직업교과과정 중 4과목 이상으로 중급수준의 과목 2개를 취득하였을 경우 ‘전문직업인’(vocational specialist)으로 칭하는 인증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직업교육의 전문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상일, 1998). 현재 몇몇 주에서 전문직업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직업능력을 인정하는 기술증명서(skill certificate)를 주고 있으나(<http://stw.ed.gov/research>) 아직까지 국가차원에서 고용으로 직결되는 자격증으로는 연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1) 1년 동안 매일 일정시간(45분) 교육을 받은 경우 카네기(Carnegie) 단위로 1학점이 부여된다.

4) 현장교육

미국의 현장교육은 1994년 <학교-직업이행기회법>을 통해 ‘학교에서의 고용으로 원활한 진입’을 강조하면서 실업계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학교내에서 직업 현장 경험과 사회 수요에 맞는 노동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강화한 프로그램이다.

현재 현장교육 프로그램은 대개 프로그램당 실습기간이 1년으로, 학생들의 욕구를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선 이론중심의 현장실습을 대학교 과과정과 연계하여 준학사(*associate degree*)를 주는 Tech-Prep(*Technical Preparation*)과, 현장실습위주로 과정이수 후 자격증이 부여되는 청소년도제(*Youth Apprenticeship*), 학교내 운영사업체에서 실습을 할 수 있는 학교운영사업(*School-based-Enterprise*), 이론교육과 작업현장의 실습을 병행하는 협동교육(*Cooperative Education*), 수업일수의 반 정도를 현장에서 직접 실습하거나 학교내에 현장세팅을 마련하여 실습을 하는 직업아카데미(*Career Academy*), 이론교육과 작업현장의 실습을 병행하며 이수 후 자격증이 부여되는 학교-직장도제(*School-to-Work Apprenticeship*) 등이 있다. 이들은 이론교육과 실습시간의 비율, 자격증 부여, 실습장소,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 여부 등을 달리하여 최대한 학생들의 욕구와 여건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현장교육은 <학교-직업이행기회법>에 근거해 학교와 현장에 실습슈퍼바이저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슈퍼바이저는 학생을 현장에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면담하고 지도하여 학생들이 제대로 현장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각 지역의 직업교육협의체는 현장교육 실시 기업에 현장교육의 지침을 전달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함으로써 기업이 적절한 현장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1997년 현재 전체 기업의 39%가 학교의 현장교육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며(Shapiro, 1999), 뉴욕주의 경우 현장교육에 참여한 기업의 99%가 학생들의 교육성공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Westchester Institute for Human Service Research, 1997) 궁극적으로 청소년 고용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5) 평가

미국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청소년의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여러 연방 법 제정을 추진하여 교육체제 전반에 걸쳐 개편 작업을 벌였다. 이에 인문계와 실업계의 통합형 학교 체계를 활성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기초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직무기준을 표준화하여 직업교육 성과의 통일성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학교와 기업 간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고, 직업교육의 운영과 평가에 산업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학교와 산업체가 서로 인적·물적 자원을 활발히 교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 결과, 현재 청소년의 원활한 고용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들어 모든 주와 많은 지역사회가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학교에서의 직업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1999년 현재 미국 전체 고등학생들의 2/3가 학교-직업이행(School-to-work)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교육 참여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학교중퇴율을 낮추었으며(www.ed.gov/office/OVE/nahs), 취업준비학생과 대학진학준비학생 모두에게 미래의 직업목표를 분명히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Hershey, Silverberg & Haimson, 199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스콘신주의 경우 1998년 현재 청년도제과정에 참여한 학생의 85%가 직업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이들 학생의 70%는 보다 높은 임금의 직업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되었다(Center on Education and Work, 1999). 또한 보스턴의 경우에도 1996년 학교-직업이행 프로그램인 Pro-Tech에 참여한 학생들의 실업률이 3%로, 미국 전체 청년실업률 2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직업교육이 고용증진에 상당히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Job for Future, 1996). 더불어 최근 미국 경제가 호황이기는 하지만 30년만에 청년실업률이 떨어진 것도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학교-직업세계이행 정책 실행이 청소년의 원활한 고용진입을 위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4. 한국의 직업교육 체계

우리나라 직업교육은 1960~70년대 급격한 산업 발달로 기술인력양성이 대거 필요하게 되자 정부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1963년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1973년 기술인력양성 및 실업계학생의 현장실습을 의무화한 <산업교육진흥법> 개정, 1974년 <국가기술자격법> 등 여러 법적 체제를 마련해 실업계 고등학교를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을 활성화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가 줄고 실업계 고교의 수준 저하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실업계 학생수를 늘리는 데 주력하였다.

1996년 들어 대통령 자문기관인 교육개혁위원회가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기능 강화를 위해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추진하였다. 이 일환으로 1997년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자격제도간에 일관성 있는 연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산학협동을 강조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여러 직종에 걸친 직무기초소양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자격기본법>, 직업교육훈련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을 제정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여기서는 한국의 학교세팅에서의 직업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파트너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교육체제, 교과과정, 현장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정부의 역할과 파트너십

청소년이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원활히 진입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고용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한데, 한국은 아직 교육부와 노동부를 통합한 행정체제는 없으며, 단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에 따라 교육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있을 뿐이며 그나마도 연구 기관이므로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다.

1990년대 중반이후 한국 정부는 교육개혁방안과 관련법 제정을 통해 공통직무능력

기준과 이를 인정하는 자격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국가 표준직무능력기준과 유사한 성격으로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근로자의 양성훈련을 위해 만든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이 있는데, 이는 개발 과정에 산업체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지고, 여러 직종에 걸친 공통적인 기초직무기준이 포함되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http://www.krivet.re.kr>). 이에 1996년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모든 직종에 필요한 공통기초 직무능력기준을 공인해 주는 '직업능력인증제' 도입을 제안하였고, 1997년 <자격기본법>에서 주요 직무기초소양과 직무수행능력을 인정하는 자격제도 도입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서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표준직무능력체제에 관한 기초연구가 착수됐을 뿐이다.

이러한 표준화된 직무기준에 산업체의 요구가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장교육에서 기업의 참여를 높이는 협력 체계의 중요성이 인식되자 한국 정부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내용의 현장성을 높이고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1997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거해 정부, 직업교육훈련계, 산업계, 노동계 대표로 구성된 중앙 차원의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와 지역에 '시·도별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우선 심의회는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지원정책 시행하고, 지역 협의회는 구체적인 직업교육훈련 실행 전략을 추진하도록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직구성으로 그쳐 있을 뿐이다. 또한 시·도별 지역의 '직업교육훈련협의회'도 구성되기는 하였지만 중앙 차원의 심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여 협의체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9).

결국 직업교육에 있어 한국 정부는 1990년 중반 이후 교육과 고용에 관한 교육 개혁을 인식하고 표준직무능력기준, 자격제도 도입, 파트너십 체계 구축 등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들은 마련하는 노력은 보였으나, 실제로 아직까지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수반되지 못함으로 직업교육 개혁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2) 교육체계

한국의 교육구조는 크게 초등교육(초등학교), 중등교육(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전문대 이상)으로 초등교육만 의무교육이 실시되나 80%이상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까지 신학하고 있다. 중학교까지는 단일한 교육구조 안에서 공통된 교육이 제공되나 고등학교부터 인문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로 구분되고 있다.

한국의 고등학교는 인문계와 실업계로 이분화 구조를 띠고 있다. 정부가 최근 들어 이러한 교육 체계의 변화를 위해 1996년에 정보고, 디자인고, 전자통신고 등 다양한 분야의 특성화 고등학교를 확대하고, 2001년에는 진학반과 취업반의 통합형 고교를 전국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전체 고등학생 중 인문계고교생 70%, 실업계고교생 25%, 특수목적고교생 5%로 여전히 엄격한 분리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인문계 고등학교는 대부분 직업교육이 제공되지 않으며, 단지 직업교육을 신청한 5% 인문계 학생만이 위탁교육이나 별도학급으로 직업교육을 받을 뿐이다(교육통계연보, 1997). 결국 직업교육은 실업계고교에서만 이루어지고, 대다수의 고등학생이 직업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분화된 학교체계는 학생들이 일단 인문계 고등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한 후에는 다시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직된 구조를 지녔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도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해운계, 기사·실업계 중 직업교육 전공분야가 학교특성별로 정해져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면 학생들의 적성과 여건이 바뀌어도 전공을 변경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러한 학생들의 직업교육 선택은 중학교 졸업시 대부분 학업성적(내신성적)과 본인의 결정이 반영되는데, 미국과 같이 본인의 적성에 맞게 진로상담을 해 주는 상담교사가 의무화되지 않아 대부분 학업성적으로 진로를 결정해 직업교육은 열등학생이 받는 교육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이 모든 학생에게 직업교육이 제공되지 않고, 직업교육 선택마저 경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직업교육에 최소한의 기본 자질을 습득하도록 하는 자질 평가도 부재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학력평가시험제도는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 학생들을 일정 수준이상의 학업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평가제도가 없고, 졸업인정요건 시험조차 없어 학생들의 기본 자질에 대한 검증장치가 미흡하다.

3) 교과과정

한국의 직업교육은 초등학교에서는 실과과목, 중학교에서는 기술산업과목을 통해 가정생활과 일의 세계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부터 보다 심화된 지식습득을 위해 농업, 공업, 산업,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의 직업관련 전문교과목이 개설되고 있다.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은 학교체계별로 교과내용과 비중이 달라 인문계의 경우 실업·가사를 제외하고 별도의 직업교과과정 없이 인문교육위주이며, 실업계의 경우는 직업관련 전문교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특성화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직업교과구성은 초등학교 때부터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초등학교의 실과과목과 중학교의 기술산업 과목은 이론위주의 지식전달로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가사·실업과목도 실질적인 직업능력 습득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취업준비를 위한 직업교과라고 할 수 없어 사실 한국의 직업교육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가 한 직업교과과정만 개별적 적성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기본교과와 직업관련 전문교과의 비중을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기본교과와 직업관련 전문교과의 비중이 80:20인 것에 비해 실업계 고등학교는 40:60으로 직업관련 직업교과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계속교육과 직업능력의 기반이 되는 기본인문교육의 비중이 훨씬 낮아 직업기초능력으로서의 기본 자질 함양이 어려운 실정이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9).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낮은 기초 학력에 비해 직업교과과정의 내용은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어려워 전문교과 학습의 곤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석민, 1995).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과과정은 산업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이돈희, 1997). 직업교과과정은 직무기준에 의해 개발되어야 직업교과내용과 현장의 직무능력과 연계성이 높고 자격증 취득도 용이하나, 한국은 최근에서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해 직무표준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의 직업교과과정은 기술검정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실업계 학생들은 직업교과과정을 이수한다해도 자격증 취득이 어렵다. 이에 실업

계 고등학생들의 대부분은 취업을 하기 위하여 학교 밖에서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한다해도 국가차원의 공인된 자격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음으로 자격증의 사회적 공신력이 낮아 직접 고용과 연결되는 데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4) 현장교육

한국의 현장교육은 실업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학기간 중 1~3개월 정도 현장실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 중 일부가 위탁교육과정을 통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극소수에 불과하여 사실상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현장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은 1973년 <산학교육진흥법>으로 의무화되었으나 구체적인 교육방법과 평가기준에 대한 규정 부재, 실습산업체의 확보 부족과 경비 지원 미흡, 지원조직의 부재로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교육개혁심의회, 1996).

현장실습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근거해 시·도별 '직업교육훈련협의회'가 구성되었지만 협의회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무근, 199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9). 따라서 현장실습의 운영지침 및 평가기준 등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참여기업에 대한 감독도 되지 않아 현장교육의 질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학교와 기업의 슈퍼바이저의 배치가 필수적이거나, 한국은 학교에만 슈퍼바이저를 두고 현장에는 슈퍼바이저가 없어 현장교육을 통한 실질적인 직무기술 습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현장교육은 학교와 기업이 개별적으로 연결하고, 기업은 현장에 대한 교육 평가결과만을 학교에 통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기업에서는 실습생에게 주로 잔심부름을 시키거나 단지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할 뿐 현장적응성 제고를 통한 학생의 고용증진의 본래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무근, 1995).

5) 평가

1990년대 중반에 들어 한국 정부는 산업인력의 부족의 해소와 종합적인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취지하에 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고자 직무기준의 표준화, 자격제도 정비, 현장교육의 강화를 위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을 수립하고 <직업교육훈련 3법>을 제정하여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교육의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재정적 지원의 세부적인 후속조치가 수반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학교세팅에서의 직업교육과 고용 간의 괴리가 있어 인력양성의 역할이나 직업기회로 이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5. 미국과 한국의 직업교육 비교분석

미국과 한국의 청소년 고용증진을 위한 직업교육체계에 대한 비교분석에 있어 외형적으로는 체계와 제도적 장치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보다 심층적으로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최근 청소년 고용증진을 위해 직업교육의 강화에 다양한 개입전략을 펴고 있는 미국의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다음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원활한 진입을 촉구하는 정부역할과 파트너십, 교육체계, 교과과정, 현장교육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정부의 역할과 파트너십

미국 정부는 1990년대 직업교육 관련법을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직업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직업교육훈련 3법을 제정하여 직업교육훈련 개혁을 시도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미국은 직업교과과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하였고, '국가표준직무위원회'를 설립하여 표준직무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Building Linkage' 프로젝트를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표준화된 직무기술을 교과과정에 반영하여 사회의 수요에 맞는 직업교과내용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다. 반면 한국은 직무기술표준화 작업을 위해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을 설립하였지만 아직까지 연구 과제로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더

〈표 2〉 미국과 한국의 직업교육 관련 정부의 역할비교

	미 국	한 국
정 부 의 역 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차원의 직업교육과정의 표준화 및 교과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표준직무기준 마련 · 국가차원에서 국가학교직업이행사무소를 설치, 지역의 직업교육협의체에 지침 전달 및 평가 지원 · 기업이 직업교육과정 선정, 현장교육, 평가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마다 직업교육협의체 구축 · 교육구조상 인문/실업계의 통합형 종합 학교 활성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과정 표준화, 직무기술 표준화 및 국가인정자격제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음 · 국가차원의 직업교육훈련심의회와 지역 협의체가 설치되었으나 실질적인 기능은 하지 못함 · 학교와 기업을 연계할 직업교육 훈련협의회가 구성만 되었을 뿐 실질적인 현장교육 지원하지 못함 · 인문/실업계 통합형 학교 시범운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가 직업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주정부에 재정지원 · 주정부는 학교에 운영비 지원 및 학생에게 훈련수당, 교통비 지원 · 주정부는 기업에 직업교육프로그램운영비, 학생 훈련수당보조(50%), 세금감면혜택(20만 달러 한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기업, 학생의 직업교육 참여를 유도하는 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 없음

미국은 산업체, 교육계 및 관련기관대표로 구성된 중앙차원의 ‘국가 학교-직업 이행사무소’를 설립하여 각 지역의 ‘직업교육협의체’에 현장교육프로그램의 기준과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각 직업교육협의체의 현장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 배치 및 평가 규정 마련에 파트너십을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도 미국과 같은 목적으로 중앙에 ‘직업교육훈련심의회’가 조직되어 ‘시·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직구성에만 그쳤을 뿐 미국과 같은 정부차원의 규제나 인센티브가 없어 파트너십 구축으로 기대되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은 오래 전부터 통합형 학교인 종합학교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이후 여러 직업교육 관련법 제정으로 종합학교를 활성화하여 직업교육의 보편화가 이루어졌다. 반면 한국은 현재 통합형 고교를 시범 운영하는 단계에 있기에 종합학교가 활성화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미국정부는 지역차원에서 직무기준 표준화, 직업교육의 보편화, 학교와 기업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주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은 주정부는 학교, 학생, 기업에 프로그램 운영비 및 훈련수당,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관련법과 명목상의 기구는 마련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행정적 촉구 방안이나 재정적 지원이 없기에 직업교육의 개혁이 실제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교육체계

미국의 교육체계는 1990년대 이후 종합학교가 활성화되면서 1992년 45%를 차지했던 종합학교가 2000년 현재 90%로 크게 활성화되어 직업교육이 보편화되었다. 반면 한국은 최근 들어 실업계와 인문계의 통합형 학교를 시범운영하는 단계로 여전히 이분화된 구조이며, 전체 고등학생수의 70%를 차지하는 인문계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이 제공되지 못해 직업교육의 보편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직업교육 선택에 있어 종합학교가 보편화되어 입학 후에도 학교 체계 내에서 인문/실업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전공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진로 선택의 유연성을 보장해 주고 있다. 반면 한국의 이분법적 구조는 자신의 적성, 능력, 여건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진로를 선택하면 진로를 변경할 수 없는 경직된 교육구조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직업교육 선택시 학교내에서 상담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 학교선택에 대한 도움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직업교육 선택이 학교 선택 후 변경이 불가능하여 진로결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담교사제도가 없어 학생들이 성적이나 자신의 결정만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모든 학생들이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을 마친 졸업생의 직무능력에 대한 기업의 신뢰를 얻도록 전국 차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최소능력시험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최소한의 학업능력수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시험제도가 자격증과 연결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남지만, 의무교육을 마치는 12학년(고3)에 실시되는 최소능력시험이 졸업 인정요건이 되어 졸업생들에 대한 일정 수준은 보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전국 차원의 시험제도가 없고, 졸업인정요건 시험마저 없어 기본 자질에 대한 검증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표 3〉 미국과 한국의 학교내 직업교육체계 비교

		미 국	한 국
교육 구조	교육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9~12학년)부터 교육형태가 구분됨 · 인문/실업계를 통합한 종합학교가 활성화되어 전체 고등학교 중 90%를 차지하게 되어 직업교육 보편화가 이루어짐 · 미국의 전체 고등학교 중 종합 학교(90%), 인문계(3%), 실업계(3%), 특수목적고(4%)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부터 교육형태가 구분됨 · 인문계와 실업계로 이분법적 구조로 인문계 학생은 직업교육을 받지 못함. 단 인문계내 위탁교육/별도학급운영반만 직업교육 받음(5%) · 한국의 전체 고등학생 중 인문계(70%), 실업계(25%), 기타 특수목적고(5%)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학년(중3) 때 고등학교 진학시 직업 교육 선택을 위해 상담교사의무화로 상담 및 정보제공 · 종합학교를 선택하면 그 학교내에서 개인의 적성에 따라 직업교육 선택을 변경할 수 있음 · 종합학교의 경우, 본격적인 직업관련 전공은 10학년 때 결정되고 졸업 학점 범위내에서 전공을 변경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진학시 주로 학업성적과 본인의 결정에 따라 직업교육 선택 · 인문계/실업계 중 선택하면 직업교육 선택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하고, 실업계의 경우 전공별 계열이 정해져 입학 후에는 전공변경이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국 차원의 '초소능력시험'을 4, 8, 12학년에 실시. 학생을 초소한의 학업능력수준에 도달시키도록 함 · 마지막 12학년(고3) 시험은 졸업인정 요건임 · 졸업시험제도가 자격증과 연계되지 않아 적극적 고용촉진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차원에서 학생을 일정한 학업수준에 도달시키고자 하는 시험제도는 없음 · 졸업인정요건 시험제도는 없음
직업 교육 선택	직업 교육 선택	직업 교육 선택	직업 교육 선택
시험 제도	시험 제도	시험 제도	시험 제도

3) 교과과정

학생들의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직업교육뿐 아니라 기본 인문교육 역시 중요한데, 이를 위해 미국은 공통교과과정의 국가공통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학생들이 일정 수준의 기본적인 인문지식을 갖추도록 관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기본과목은 인문계와 실업계 모두 동일하나 기본과목과 선택과목의 비중이 갈라 실업계고등학교의 기본적 인문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실업계 학

〈표 4〉 미국과 한국의 직업교육 교과과정 비교

	미 국	한 국
일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필수과정의 국가공통기준을 마련 · 기본과목에 대해 학생들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도록 평가제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계/실업계 학교간 기본과목은 동일하나 기본과목과 선택과목의 시간 배정이 다름 · 학생들을 일정 수준을 성취하도록 하는 별도 평가제도 없음
교과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학교 직업교과 과정은 소티자·가정관리, 기초직업교육과정, 전문직업교육 과정으로 구분 · 표준직무기준을 교과과정에 도입하여 기초직업능력 향상도모 · 다양한 교과과정 제공으로 개인의 적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모듈화) · 직업교과이수시 시험·자격증과 연계되어 있지는 않지만 직업 능력 인정 체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계/실업계 학교 직업교과는 농업, 공업, 상업, 수산·레유, 가사·실업 중 학교특성별 선택 · 기초직업능력에 대한 기준 및 내용이 가려지지 못함 · 학교 차원에서 선택한 교과과정 따라 개인의 적성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정해짐 · 직업교과과정 이수를 검증하는 자격증과 연계되어 있지 못하고 별도의 인정 체계도 없음

생들의 계속교육에 한계를 가져왔고 직업교육에 있어서도 기초능력의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표준화된 직무기준을 교과과정에 도입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빠른 기술교체를 보이는 직업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교과과정에 있어 기초적인 직업기술을 익히는 데 강조를 두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직업교육이 대부분 실업계 고등학생으로 한정되는데, 우선 직무기술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직업교과과정에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직업교과과정에 기초직업능력에 대한 기준과 교육내용이 전무한 실정으로 청소년들이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고용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

미국은 전문직업교육도 모듈화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전문화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분야 전문인 양성을 유도하고 전문직업교과의 이수를 인정하기 위해 국가적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직업교과과정이 국가인정자격증 이수과목과 연결되지 않아 청소년의 고용진입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각 학교당 하나의 전문직업교과과정만을 개설하므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

여 직업교육을 선택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과정도 자격증 이수과목과 연결되지 않아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교 밖에서 별도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실정이다.

4) 현장교육

현장교육은 학교교육과 직업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토써, 학생들이 현장에서 고용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미국의 현장교육은 최근 학교-기업이행체계 실시 이후 실업계 및 종합학교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현장교육에 참여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현장교육의 대상이 실업계 고등학생들로 제한되어 있고 다만 인문계의 소수의 위탁교육생만이 현장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현장교육 프로그램에 있어 미국의 경우 이론중심의 현장실습을 대학교과과정을 연계하는 ‘기술준비프로그램’, 현장실습 후 자격증이 부여되는 ‘청소년 도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병행하는 ‘협동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현장교육프로그램이 활용되어 모든 학생들이 각 개인의 진로와 여건에 맞춰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현장견학 및 현장실습으로 프로그램 시간이나 구성이 획일적으로 운영되어 현실적으로 인문계학생의 참여가 불가능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현장교육 참여학생은 지역직업교육협의체를 통해 기업에 연결되며, 기업은 협의체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현장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직업교육훈련협의회가 구성만 되어 있을 뿐 아무런 기능을 못하여 아직도 학교가 직접 기업과 개별적으로 연결하며 현장교육에 대한 기준과 지침이 없어 기업에 모든 책임과 권한이 일임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학교와 현장 모두에 슈퍼바이저를 배치하여 상담 및 지도를 통해 학생들을 양쪽에서 관리하여 학생의 현장능력을 높이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학교에는 현장교육을 담당하는 슈퍼바이저를 두고 있으나 현장에는 슈퍼바이저가 없어 학생의 현장교육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아 학생들의 고용능력 향상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표 5〉 미국과 한국의 현장교육 비교

	미 국	한 국
현 장 교 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학교뿐 아니라 종합학교 등 모든 학생의 참여 가능 · 현장교육 교과과정은 주(州)마다 다소 상이하나 주로 현장방문 및 다양한 형태의 현장교육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음 · 지역의 직업교육협의회가 학생과 기업 연결 · 직업교육협의회에 의한 현장교육기준 및 감독·평가를 통해 기업 현장교육의 질 보장 · 학교와 현장에 슈퍼바이저를 배치하여 현장교육 연결, 상담 등 적절한 슈퍼비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계 고등학생 학생들로 제한(인문계는 위탁교육생에 한해 현장교육 가능) · 현장교육 교과과정은 현장전학 및 현장실습으로 획일적 · 학교와 기업이 직접 개별적으로 연결 · 기업이 임의로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현장교육에 대한 질 관리가 안됨 · 학교에는 현장교육을 위한 슈퍼바이저가 있으나 현장에는 없어 슈퍼비전이 제대로 안됨

6.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

미국은 직업표준직무기준을 마련하여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학교와 기업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인문계와 실업계의 통합형 학교를 통한 직업교육의 보편화를 이룩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직업관련 구성요소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입 전략을 추진하여 청소년의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진입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 결과, 현장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직업능력이 높아져 취업시 유리해졌고 고용과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tern, 1995).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1997년 직업교육훈련관련법을 통해 직업교육의 법령을 마련하였으나 청소년을 직업세계로 진입시키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단편적인 제도와 법령들이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틀 속에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통합형 학교에 대한 시범운영의 움직임은 있으나 여전히 인문계와 실업계의 이분법적 분리구조로 되어 있고, 실제 직업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과과정의 개혁이나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청소년 고용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자명해 보인다.

미국의 경우도 과거에 주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왔으나 청소년 고용증진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94년에 학교-

직업이행기회법을 제정하고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으로 효과를 거둔 것은 한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미국정부가 주도적으로 교육체제와 교과과정의 변혁을 추진하였고, 현장교육을 위한 기업과 학교간의 협력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와 전폭적인 재정 지원에 노력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처럼 미국의 직업교육이 청소년의 고용을 촉진시키기는 했지만 아직도 국가적으로 자격증 체계가 정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격증이 직업교육 및 평가제도에 연결되지 않아서 미국 역시 청소년을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원활히 진입시키는 데 한계를 가진다. 청소년의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자격증체도가 정비되고, 이러한 자격증의 획득이 곧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자격을 갖추었다는 보증이 되도록 교과과정 및 평가제도와 연계된다면, 청소년 고용이 더욱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교육정책과 고용정책이 밀접히 연결되도록 행정구조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이 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시사점에 의거하여, 청소년이 학교에서 직장생활로의 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고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업교육의 정책적 큰 틀을 제시해야 하고, 정부의 강력한 주도하에 자격제도, 교육체제, 교과과정, 현장교육을 변혁시키는 한편 이 제도들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권한과 재정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정책과 노동정책이 밀접히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구조의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이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과 노동정책이 전체적인 하나의 큰 틀 속에서 통합되어야 효과적인 정책수행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현재의 교육부와 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행정구조를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이 졸업 후 고용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에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기술을 반영하도록 직무기술을 표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교과과정을 개발하기 전에 국가차원의 직무기술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직무기술 표준화 작업을 위해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계,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이 고용으로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가인정 자격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격증이 사회에서 일정 자격과 기술을 갖추었다는 보증이 될 때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선 현재 난립된 자격제도를 국가인정자격제도로 정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직무기술이 자격증과 교과목 모두에 반영되도록 자격증과 교과목이 연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의 원활한 고용진입을 위해서는 학교와 산업체 간의 파트너십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교육계와 산업체를 연결해줄 수 있는 협의체를 설립하여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학생들의 배치와 평가에 관한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장교육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유명무실한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행정적 권한을 주고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그 기능을 살려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행 인문계와 실업계의 이분법적인 분리교육 패러다임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직업교육제도는 모든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결정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통합교육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실업계 학생들이 인문교육을 충실히 받지 못하는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모든 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의 실업계 고등학교를 점차 줄여가면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종합학교체제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학생들이 최소한의 기본자질을 갖추고 일정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소능력시험 같은 평가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각 교육단계마다 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이 기본자질을 갖추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청소년의 고용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졸업평가제도와 자격증제도를 동일하게 인정하여 교육체제 안에서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청소년들의 고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과내용을 통해 모든 청소년들이 기본자질을 갖추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받도록 실업계 및 인문계의 모든 청소년을 위한 기본적인 인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합구조의 형태로 변화시키는 한편 실업계 학생들도 기본인문교육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급속한 기술의 변화로 인해 모든 직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직무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에 읽기·쓰기·셈하기, 학습능력, 대인관계기술, 팀워크 등의 기초직무교과과정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직무교과과정은 직무기

술표준화를 통해 구체화된 기초직무기술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러한 교과과정은 새로운 교과목으로 개설될 수 있지만 기존의 필수교과목에 직업기초기술 내용을 통합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직업기초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아홉째, 인문교육 및 기초능력뿐 아니라 전문직업교육의 강화도 필요한데, 학생들이 적성과 수준에 맞는 직종별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과목을 제공하고 전공 모듈방식을 도입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업 교과목과 자격증 이수과목을 연결하여 일정교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같이 특정분야 전문인의 양성을 유도하고 전문직업교과 이수의 인정을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도 중간단계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열 번째, 직업교육에 있어서 현장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획일적인 현장실습을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직업교육협의체가 수립한 현장교육 기준에 따라 기업이 현장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니터 및 평가를 철저히 하여 현장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와 기업 모두에 슈퍼바이저를 두어 학생들을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지도하여 효과적인 현장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교육개혁위원회. 1996.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신명훈. 1998. “일과 학습 및 자격의 연계 방안.” 《21세기 직업 전망과 직업교육훈련의 방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이돈희. 1997. 《2000년 실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체제구조안》, 한국교육개발원.
 이무근. 1995. “세계 주요국의 직업동향과 한국직업교육의 발전방향”, 《직업교육연구》 제14호(1).
 _____. 1998. “한국 직업교육의 실상과 개혁 방안,” 《1998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교육학회.
 이상일. 1998. 《미국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새로운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이용순. 1998. “고등학교 직업교육체제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고등학교 직업교육

- 방향설정)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주호. 1996. 《고용대책과 인적자원개발 - 제도적 접근》. 한국개발연구원.
- 장석민. 1995. 《중등교육에서의 직업교육체제와 교육과정의 개선방안 : 21세기를 향한 직업교육체제개편의 방향》, 학술발표자료집, pp. 38~41.
- 정영순·석재은. 2000. “청소년 고용증진을 위한 영국과 한국의 직업교육 제도의 비교.” 《사회보장연구》 제16호.
- 정인수. 1996. 《고용구조변화와 정책과제 : OECD 경험의 함의와 한국의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1999. 《청년층 실업현황과 고용촉진대책》. 한국노동연구원.
- 진미석. 1997. “미국, 독일, 일본의 산학협동체제.” 《새교육》 12월호.
- 통계청. 1999. 경제활동인구조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9. 《직업교육 재정진단 및 개선방안 정책보고서》.
- Bailey, T. & Merritt, D. 1993. *The School-To-Work Transition and Youth Apprenticeship: Lessons from the U. S. Experience*. NY: Manpower Demonstration Research Corporation.
- Berryman, S. E. & Bailey, T. 1992. *The Double Helix: Education and the Economy*. NY: Teachers College Press.
- Center on Education and work. 1999. *Wisconsin Youth Apprenticeship road to success; a synthesis of findings and outcomes from evaluation & research studies*. Madison, WI.
- Drake, K. 1994. “Policy Intergration and Co-operation a Persistent Challeng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Youth: Towards Coherent Policy and Practice*. Ch. 7. OECD.
- Dykman, A. 1996. *Powerful Partnerships for School-to-Career Success Through Business & Education Co-operation*. American Vocational Association.
- Hershey, Silverberg & Haimson. 1999. *Career Academies: Impact on students' engagement and performance in high school*. New York: Manpower Demonstration Research Corporation.
- Hoerner, J. L. & Wehrley, J. B. 1995. *Work-Based Learning: The Key to School-To-Work Transition*. Glencoe/MacMillan McGraw Hill.
- ILO. 1997. *The Challenge of Youth Unemployment: Employment and Training papers*. 7. <http://www.ilo.org/public/english/employment/publ/etp7.htm>.
- Job for future. 1996. *School-to-career initiative demonstrates significant impact on young people*. Boston.

- Martin, A. & Bradlet, S. 1997. "Modeling the Transition from School and the Demand for Transition in the United Kingdom." *Economica*, 64, pp.387~413.
- OECD. 1998a. *Getting Start Setting in the Labour Market: OECD Employment Outlook*.
- _____. 1998b. *Thematic Review of the Transition from Initial Education to Working life-The United States*.
- _____. 1999a. *Giving Youth a Better start: OECD Employment Outlook*.
- _____. 1999b. *Preparing Youth for the 21st Century: The Policy Lessons Form the Past Two Decades*. <http://www.oecd.org/els/conferences/youthemp.htm>.
- _____. 2000. *The Thematic Review of the Transition from Initial Education to Working life*.
- O'Higgins, N. 2001. *Youth Unemployment and Employment Policy; A Global Perspective*. ILO.
- Papadopoulos, G. 1994. "Linkages a New Vision for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Youth: Towards Coherent Policy and Practice*. Ch. 8. OECD.
- Raffe, D. 1994. "Compulsory Education and What Then? Signals, Choices, Pathways."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Youth: Towards Coherent Policy and Practice*. Ch. 4. OECD.
- Raizen, E. R. 1989. *A Review of Programs Involving College Students as Tutors or Mentors in Grades K-12*. Washington, DC: Policy Studies Associates, Inc.
- Resnick, L.B. 1987. *Learning in School and Out Educational Researcher*, 16(9).
- Stern, D. 1995. *School-to-Work: Research on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Falmer Press.
- Vickers, M. 1994. "The Context and Rationale for the Reform of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Youth: Towards Coherent Policy and Practice*. Ch. 1. OECD.
- Westchester Institute for Human Service Research. 1997. *New York State School-to-work Opportunities System: Interim evaluation report, lessons learned*. White Plains, NY.

Study on Vocational Education in Schools to Promote the School-to-Work Transi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in Korean and the U.S. Systems

Chung, Young-Soon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Song, Youn-Kyoung (MA,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the reform of vocational education plans so as to bring about a seamless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It puts forward a number of suggestions based upon an analysis of vocational education policies in Korean and U.S. schools, concerning the government's role, partnerships between education and industry, the educational system, curriculum and work-based learning.

First, not only government initiatives but also close partnerships between education and industry are essential to help vocational education in school the transition to employment. Education and industry should work closely together to standardize certificate related skills and to have these skills reflected in the curriculum. Also the government should strive to provide guidelines for work-based learning and formulate standards for supervision and evaluation. Second, to facilitate the school to work transition, comprehensive schools should be promoted so that students have access to a greater ranger of vocational education. At the same time, an assessment system that certifies a mastering of the basic skills of those who undergo the education should be introduced, and it should be related to earn these certificates. Third, standardized vocational skills should be included in the curriculum so that students can acquire skills that are useful for industry. All the students in vocational and general high schools should have access both to general education, the foundation for lifelong learning and for employ ability, and

to basic occupational skills which empower students in dealing with rapid changes of technology. Also a range of specialized vocational curricula should be offered so that students can opt for more specialized occupations; and they can select careers appropriate to their capability. Fourth, so that all students to have the opportunity to take part in work-based education, which is closely related to employment, various work-based learning programs should be offered to meet the needs of students and their educational conditions. Companies should for their part train students thoroughly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of work-based education. In addition, supervisors should be stationed both in schools and companies in order to administer the students' work-based learning.